

## 지적사항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A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의2에서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A과 @@업무담당자와 직원 1명은 A과가 혼자 자체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이용하여 상급부서단위평가 실적가점 대상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문을 첨부하여 실적가점(0.5점)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정기인사 시 @@업무담당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순위 상향조정 되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결원(기관·기구별 정원기준에 근거)이 발생한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에서는 「00년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계획」 수립 시 결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직렬(방송통신 6급)을 승진대상 직렬로 결정하고, 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인사 시 방송통신 7급을 방송통신 6급으로

승진임용 하였고,

- 또한, 「00년 상반기 정기인사 운영계획」 수립 시에도 결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직렬(사회복지 5급)을 승진대상 직렬로 결정하고 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정기인사 시 사회복지 6급을 사회복지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 직렬불부합을 초래하였다.

## [처 분 요 구]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업무담당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하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A과 실무담당자 \*\*\*와, &&&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실무책임자 %%%와 감독책임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인사’ 시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B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수질거마 미 실시)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지 적 사 항]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 57조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 제조·가공업 : 1년 마다 수질검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I-3에 따라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합천군 B과에서는 2017년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업소의 수질검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대상업소 중 2개 업소가 수질검사 기한이 6~11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위의 식품위생법 위반(수질검사 미 실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5 일)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일한 법령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질 검사 대상업소 관리 방안(검사기한 전 사전예고 등)을 마련하시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C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부과 74,000천 원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가축방역 교육 관리 부적정

[지 적 사 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예방접종·방역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50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명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년 ~ 6년 이상 경과하도록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상기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C과 ###, \$\$\$,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 따라 과태료(100만 원)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법률 위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D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목] 경로당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소홀

[지 적 사 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종합건설업 면허시공 규모 :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
- 전문건설업 면허시공 규모 : 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는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

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조사업자 !!면 @@@, ##면 \$\$\$ 등 2명은 2015년도 ‘○○ 및 △△ ◇◇◇ 신축공사’[계약상대자 :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를 시행하면서, 본 공사비는 5천만 원 이상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면 @@@, ##면 \$\$\$ 등 2명의 보조사업자가 ◇◇◇ 신축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과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기 바라며,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조사업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D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부과 17,100천 원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목]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행정처분 소홀

[지 적 사 항]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르면 위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은 경우 과태료는 2만 원,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 원을 부과하여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은 붙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과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 ★★ 소유 ◎◎◎가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무려 24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총 ●●건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17,1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과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기 바람,

-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7,100천 원은 즉시 부과하시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E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부과 4,000천 원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목]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지 적 사 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합천군은 ◇◇면 소재 ‘●●● ◇◇점(대표 △△)’ 등 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사전통지만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적정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아울러 ▲▲면 소재 ‘□□점(대표 ≡≡)’ 등 4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천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계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적정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E과 ㄴ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라며,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별표11]에 따라 과징금(100만 원) 부과 조치하시고,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법령 위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A부서, B부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영상테마파크 안전관리 소홀 및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부재

[지 적 사 항]

### 가. 영상테마파크 안전관리 소홀

#### < 합천군 영상테마마크 시설 현황 >

위 치	면 적	주요시설	촬영작품	비고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부지 <u>74,629㎡</u> 건축 <u>10,953㎡</u> (문화 및 집회시설)	◦촬영세트 : 153동 ◦편의시설 : 매점4, 커피숍3, 식당8, 로컬푸드직매장 등	<u>총 233편</u> 영화 : 태극기휘날리며, 암살 등 드라마 : 각시탈, 경성스캔들 등 (2016년 14편, 2017년 18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합천군 영상테마파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이며,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대상이고 특히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합천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 시설물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합천군은 지진, 화재 등 위기상황과 재난으로부터 관람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등 영상테마파크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은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위기상황 발생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 2017년 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영상테마파크 지진 발생에 따른 훈련을 1회 실시하였을 뿐,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자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나. 현장 내 시설물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 부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시설물은 대부분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위해 조밀하게 건축 또는 설치되었고, 외벽마감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아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임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현장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영상테마파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정규직 공무원 없이 청원경찰 4명, 공무원 6명 등 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물 및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이 없어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취약할 뿐 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다. 청원경찰 근무실태 개선 필요

##### <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청원경찰 근무실태 >

배치근거	근무인원	근무형태	주요 업무	비 고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4조	4명	주간 오전 9시 ~ 6시 (필요시 당직, 휴일근무 등 연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물 및 환경정비 관리</li> <li>◦출입차량 통제 및 주차관리</li> <li>◦주말 및 공휴일 매표소 지원근무</li> </ul>	

-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배치장소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고,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와 수당은 「같은 법」 제6조(청원경찰경비)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하되,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하게 될 경우 및 「같은 규정」 제16조(현업 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 영상테마파크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외에 시설물 관리 및 매표소 지원 등의 청원경찰 본연의 직무 외 업무를 담당 또는 지원하고 있고,
- 별도의 근무규칙 등 근거규정 없이 근무자 1명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없이 당직비 5만원을 지급받고 1일간 대체휴무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매주 휴관일(월요일)에는 2명씩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처 분 요 구]

- 위와 같이 합천군 A부서에 근무하면서 영상테마파크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사무관 ○○○과 지방행정주사 ○○○, 실무담당자 지방시설주사보 ○○○과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직 개편 시 정원조정을 통한 영상테마파크 현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와 수당 지급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청원경찰의 복무를 규율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는 등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와 수당 지급 업무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와 자체훈련 실시 등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C부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창업 사업계획(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 소홀

[지 적 사 항]

### 가. 창업 사업계획(제조시설 설치) 승인 부적정

#### < 저수지 상류지역 창업 사업계획(제조시설 설치) 부적정 승인 사례 >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공장용지 면적(㎡)	공장면적(㎡)		
				건축 면적	제조 시설	부대 시설
a회사 (○○○ 외1명)	가회면 오도리 390-4외 4개소 ⇒ <u>@@소류지 상류방향으로 1.1km정도에 위치</u>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제품제조업(10730)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6,556	1,815	1,254	561
b회사 (○○○ 외1명)	삼가면 어전리 500-2 ⇒ <u>##저수지 상류방향으로 0.1km정도에 위치</u>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17901)	11,700	3,579	2,435	1,144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설립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지역)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의 지역은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나,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지역의 예외)에 따라 공장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이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공장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합천군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창업 사업계획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지역 주변의 저수지 존재 유무와 수질오염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은 2015. 2. 27. a회사(대표 ○○○ 외 1명)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의 수계상 @@소류지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1km 정도 위치한 지역에 공장설립 신청을 받고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지 않고 2015. 3. 20. 승인 처리하였다.
- 또한 2016. 7. 21. b회사(대표 ○○○ 외 1명)로부터 수계상 ##저수지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0.1km 이내의 저수지와 매우 인접한 지역에 공장설립 신청을 받았음에도 환경상 안전한 대책수립 및 협의 없이 2016. 7. 25. 그대로 승인하였다.

#### 나. 공장등록대장 사후관리 업무 소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은 최근 3년간(2015 ~ 2017년)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등 변경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처 분 요 구]

- 위와 같이 합천군 C부서에 근무하면서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공업주사 ○○○과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고,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업 사업계획(제조시설 설치)을 승인한 2건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 수립하여 관할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이행하는 등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D부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추진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사업주체 (대행업체)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예산과목)
		계	학생	인솔	계	군비	자부담	
계		81	70	11	319,403	255,800	63,603	
2015	합천교육지원청 [주●●●●여행사]	26	22	4	96,803	80,000	16,803	출연금
2016	합천군 [주●●●●여행사]	27	24	3	112,000	88,000	24,000	민간인 국외여비
2017	합천군 [주●●●●여행사]	28	24	4	110,600	87,800	22,800	민간인 국외여비

### 가. 문화체험연수 지원근거 부재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그 목

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출연할 수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합천군은 이에 해당함)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

○ 따라서 합천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내 우수대학을 방문하고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로 설립한 공공기관이 아닌 (사)◆◆◆◆위원회에 출연금으로 교부하거나 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할 수 없다.

○ 그러나 합천군은 당해 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이 제한되자 2015년에는 (사)◆◆◆◆위원회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시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의 명시적 근거 없이 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였고 학생들에게 연수경비를 지원하였다.

## 나. 민간인 국외여비 현금 지출 부적정

○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라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그러나 합천군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문화체험연수 개별 참

가자에게 계좌입금하지 않고 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대행업체 여행사에 일괄 입금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른 회계질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 [처 분 요 구]

- 위와 같이 합천군 D부서에 근무하면서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지방행정사무관 ○○○, ○○○과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주사 ○○○,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고,
-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경비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령」과 「지방회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E부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5명

[제 목] 대장경테마파크 조경공사 분할발주 시행

[지 적 사 항]

### < 대장경테마파크 조경공사 분할발주 현황 >

(단위 : 원)

연도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고
계	21건		382,494,900		
2015	대장경테마파크 수목이식작업	2015. 2. 9.	19,570,000	a업체	
	대장경테마파크 수목식재 기반조성 공사	2015. 3.11.	19,759,000	b업체	
	테마파크 산책로 데크 설치공사	2015. 3.19.	18,319,000	c업체	
	대장경테마파크 지내 조형소나무 식재	2015. 3.20.	18,968,000	a업체	
	현수소나무 이식공사 및 기타정비 공사	2015. 4. 1.	18,881,000	a업체	
	대장경테마파크 보리수식재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	2015. 5. 4.	19,734,000	b업체	
	원형저류지 난간 및 바닥데크 설치공사	2015. 6.17.	16,098,000	c업체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산책로 수목식재공사	2015.11.30.	19,274,400	d업체	
	대장경 빛소리관 주변 수목식재 공사	2015.12. 3.	13,412,500	d업체	
2016	대장경테마파크 산책로 정비공사	2016. 5. 3.	9,889,000	c업체	
	대장경테마파크 진입부 녹도 조성사업	2016. 6.21.	19,670,000	e업체	
	대장경테마파크 배롱나무 이식공사	2016. 8.16.	19,960,000	e업체	
	대장경나무 식재공사 시행	2016.11. 1.	19,060,000	e업체	
2017	대장경 테마파크 수목이식공사 시행	2017. 6.20.	20,500,000	e업체	
	대장경 테마파크 이동로 개선사업 시행	2017. 6.28.	14,800,000	c업체	
	대장경 녹지대 식재공사	2017. 7. 3.	20,400,000	f업체	
	롤러미끄럼틀 주변 편백나무 숲길 조성공사 시행	2017. 8.17.	20,000,000	e업체	
	대장경테마파크 배수로상단 초화류 식재공사	2017. 9.11.	20,600,000	b업체	
	대장경테마파크 입구 인도 조성공사 시행	2017. 9.27.	14,500,000	c업체	
	대장경테마파크 거울연못 분수대 설치공사	2017.11.27.	20,700,000	g업체	
	대장경테마파크 법면 황매화 식재사업 시행	2017.12.12.	18,400,000	f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

약할 수 없고,

-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여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합천군은 대장경테마파크 내 원활한 조경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분할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여야 하나,

- 위 분할발주 현황과 같이 체계적인 발주계획 수립과 검토 없이 지난 3년간(2015 ~ 2017년) 21건의 382,495천 원의 대장경테마파크 내 조경공사를 무분별하게 분할 발주하여 시행하였다.

## [처 분 요 구]

○ 위와 같이 합천군 E부서에 근무하면서 조경공사 발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지방시설주사 ○○○, ○○○과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F부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49천원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지 적 사 항]

### < ◆◆보조단체 신용카드 부당사용 현황 >

(단위 : 원)

사용일자	카드 이용업소	집행금액	부당 사용내용	비 고
계	15건	1,149,343		
2015. 2. 11.	△△카센터	52,000	개인차량 정비	
2015. 4. 24.	◇◇치과의원	280,000	치과 이용	
2015. 6. 17.	▽▽카센터	50,000	개인차량 정비	
2015. 9. 12.	㉠㉠안경콘택트	60,000	안경점 이용	
2015. 11. 5.	▽▽카센터	50,000	개인차량 정비	
2015. 11. 18.	aaa모바일/온라인	67,820	사용목적 불분명	
2015. 11. 20.	△△카센터	48,000	개인차량 정비	
2016. 3. 22.	◁◁카센터	40,000	개인차량 정비	
2016. 5. 20.	●●쇼핑아울렛	30,000	사용목적 불분명	
2016. 6. 27..	△△카센터	125,000	개인차량 정비	
2016. 9. 1.	◁◁카센터	40,000	개인차량 정비	
2016. 12. 25.	▲▲카센터	100,000	개인차량 정비	
2017. 3. 9.	▼▼가스충전소	76,523	사용목적 불분명	
2017. 4. 16.	㉠㉠안경콘택트	50,000	안경점 이용	
2017. 8. 30.	◁◁카센터	80,000	개인차량 정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 「같은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보조사업자 합천문화원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문화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 합천군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난 3년간 ◆◆보조단체의 운영보조금 집행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보조단체는 보조사업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15건 1,149천 원을 사용하였고,
  - 합천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매년 ◆◆보조단체의 정산검사를 하였으나, ◆◆보조단체이 운영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등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 [처 분 요 구]

- 위와 같이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합천군 F부서의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주사 ○○○과 실무담당자 지방행주사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고,
- 합천문화원의 운영보조금 집행내역 중 문화원 운영과 관련 없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1,149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문화원 운영보조금 집행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G부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지 적 사 항]

### 가. 입찰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다만 재공고입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합천군은 G부서 소관 각종 공사와 물품 구매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에 따른 공고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 G부서의 지난 3년간(2015년 ~ 2017년) 입찰공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건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기간보다 1일에서 2일 짧게 공고하여 처리하였다.

#### 나.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분할발주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여서는 안 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의 5.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따라서 합천군은 G부서 소관 각종 공사를 위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총괄적인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물품 구입·제조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합천군 G부서는 지난 3년간(2015 ~ 2017년) 예산 절감 등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단일공사를 17건 235,196천 원으로 분할 발주하였고,

-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하여도 금연보조 물품 등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구매하지 않고 30건 160,152천 원으로 합리적인 구매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분할하여 구매하였다.

## [처 분 요 구]

- 위와 같이 합천군 G부서 소관 각종 공사와 물품의 발주 및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지방의료기술주사 ○○○과 ○○○,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지방보건주사 ○○○과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 예규에 따라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와 계약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A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지 적 사 항]

-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을 말하고,
  - 제5항에서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2년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제6장 농지의 전용 다. 전용허가제한 (3) 허가제한 시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며,
  - <참고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에서 “같은 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개념과는 다르며,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전용하였을 경우에도 동일부지에 해당되는 반면, 한 필지의 농지를 두 종류 이상의 사업목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부지에 해당되지 않고,

- 하나의 부지에 전용목적사업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필지를 분할을 하는 등)하지 않고 2종류 이상의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는 동일 부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00. 9. 7.)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제한면적(1,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00. 6. 5.)에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동일한데도 시설별 허가제한면적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제삼자의 명의를 빌려 2인 이상이 동일한 부지 또는 연접한 농지를 동일한 전용목적 시설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1건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으로 간주하여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와 제삼자의 명의를 빌려 2인 이상이 연접한 농지를 동일한 전용목적 시설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제한면적을 적용하여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도 함천군 @@과에서는 2015. 3. 31. ∅∅시 ∆∆면 ■■일주로 ◇◇번지 @@@ 등 5명이 토지소유자(공유자 : @@@)의 사용승낙을 받아 동일한 필지(∅∅군 ∆∆면 ■■리 @@@번지(생산관리지역, 4,379㎡)에 단독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5건을 진행함에 있어, 「농지법」에 따른 제한면적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2015. 4. 6. 제한면적(1,000㎡)을 초과하여 농지전용 허가(협의)하는 등 총 5건의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귀 기관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

치하시기 바라며, 법령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지전용허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예시, 관리대장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시 시설별 허가제한면적(단독주택 : 1,000㎡)을 초과함에도 허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도시건축과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도시건축과 실무담당자, 도시건축과 실무책임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B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국가하천(황강) 하도정비사업 사토 매각 부적정

[지 적 사 항]

### 가. 국가하천(황강) 하도정비사업 사토 매각 부적정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고,
  - 같은 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시행 허가를 득하여 국가하천(황강)의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는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

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활용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합천군@@과에서는 2017. 6.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면 ΔΔ리 지내 국가하천(황강)의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득한 후 2017. 6. 29.부터 “■ ■ 지구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하도정비사업 L=1.228km, 사토 발생량 372,033㎥)
- 2017. 8. 28. “■ ■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판매 계획”에서 하도정비로 인하여 발생한 사토를 판매하기 위하여 공고일 현재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합천군 관내 야적장을 3,000㎥ 이상 확보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일반경쟁입찰하여 최고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017. 8. 28.일 “■ ■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매각 공고”하였다.(합천군 공고 제◇◇-☆☆호)
-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으로 인하여 2017. 9. 1. “■ ■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사토(원석) 판매 재공고 계획”에서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였고,

최초 공고	재공고	비 고
<b>공고일 현재</b>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b>공고일 전일 현재</b>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b>공고일 현재</b> 합천군내에 야적장으로 인·허가를 득한 부지를 3,000㎥이상 확보한 업체로 인·허가 서류 등(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미제출 시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단, 본 사업목적(다른 법령 등)과 다른 용도의 토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b>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b> 합천군내에 야적장으로 인·허가를 득한 부지를 3,000㎥이상 확보한 업체로 인·허가 서류 등(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미제출 시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2017. 9. 8. “■ ■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매각 취소공고계획”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야적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한 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 ■ 지구 하도정비사업 사토 매각 공고를 취소하고, 매각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그러나, 2017. 10. 13. “■ ■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판매 계획”에서 국가하천(황강)의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함에도 판매가격은 17,000원/㎥으로 군에서 직영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 2017. 10. 13. “■ ■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판매 가격 및 운영

계획(안)”을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골재판매가격결정)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골재판매가격은 17,000원/㎥, 군에서 직영 판매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후 2017. 10. 23. “사토(모래) 판매 시행 공고”하였으며,

-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토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군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하게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하여 일반 경쟁입찰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국유재산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 ■ 지구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 299,908㎥ (총 발생량 372,033㎥의 80%), 판매 금액 약 5,098,436천원을 2018. 2. 2.까지 군에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하여 직영 판매하고 있다.
- 또한, 2016년도에 시행한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판매”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예정가격을 13,200원/㎥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6,700원/㎥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판매하였고(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126%),
- 이를 바탕으로 ■ ■ 지구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토(예정가격 14,575원/㎥)의 낙찰가격을 추정하면 18,130원/㎥이며, 합천군 군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하게 결정된 판매가격(17,000원/㎥)으로 사토를 전량 판매할 경우 약 420,397천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계약 해지 업체에 대한 제재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6. 2. 15.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추진하였고, 최고가 낙찰자인 (주)@@산업과 5차(1차~4차 20%, 5차 10%)에 걸쳐 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3,590,850천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2016. 8. 8. “☆☆지구 하도정비사업 발생 사토(원석) 매매계약 해지 및 잔량 판매계획”에서 4~5차(30%, 1,077,255천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하였고, 사토 잔량을 군에서 직영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

하여 2016. 8. 16.부터 사토 판매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합천군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주)@@산업)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계약해지 후 17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 [처 분 요 구]

- 귀 기관에서 2017. 10. 2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지구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의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하였고, “☆☆지구 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 건과 같이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준설토)의 판매 가격 및 방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 검토 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 ■ 지구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한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 등 주요 정책결정(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하고, ☆ ☆ 지구 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정당업체 제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책임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 하도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토에 대한 주요정책결정(일반적인 사항)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한 @@과 감독책임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C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소규모영향평가 미이행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협의) 부적정

[지 적 사 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에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는 아래와 같다.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 제2항에서는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인 ∅∅군 ∆∆면 ■■리 ☆☆번지 일원에 실질적인 동일사업자인 ### 등이 단독주택 등 건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협의)를 추진하면서 사업면적의 합이 8,758㎡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의 허가(협의)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협의) 하였다.
- 또한, 합천군 @@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인 ∅∅군 ∆∆면 ■■리 산70번지 일원에 실질적인 동일사업자인 ◇◇◇◇와 ㄹㄹㄹㄹ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협의)를 추진하면서 사업면적의 합이 14,90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의 허가(협의)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3. 21. 실무종합협의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허가(협의) 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건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협의)하였다.

[처 분 요 구]

- 귀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를 위반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수사과, 환경평가과)에 위반사항 “통보”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물의 건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별법에 대한 허가(협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과에 대하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2016. 3. 22. ∅∅군 △△면 ■■리 산☆☆번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라 연접한 개발사업의 면적이 14,900㎡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허가(협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과 실무책임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7명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취득세 추징 업무처리 소홀

[지 적 사 항]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 및 발급업무 처리 소홀

-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 같은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59조(벌칙)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적



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할 때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 같은 규정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에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라 관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범위를 벗어나는지,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ΔΔ면 ■■리 ☆☆번지 등 총 14필지가 농업 경영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 나.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 추정업무 처리 소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함)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하여야 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 12. 31.까지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 ##과에서는 2015. 12. 28. ∅∅영농조합법인이 △△면 ■■리 ☆☆번지 등 13필지를 농업 경영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였으나,
  - 2018년 합천군종합감사 기간중에 농업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어, 감면취득세 ❸❸❸천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 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감면취득세 대상지 연계 조사 미흡

- 합천군 @@과에서는 「농지법」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농지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조사 대상 목록 등이 포함된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여 농지처분명령 등을 하여야 하고, 세무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등에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용도로 농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합천군 @@과에서는 농업법인에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중점관리대상 등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하여 ❸❸군 △△면 ■■리 ☆☆번지 등 13개소가 농업 경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및 감면취득세 추징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귀 기관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감면 취득세 추징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과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15. 6. 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ㄱㄱ에서 “농업경영목적”으로 매수한 ㄱㄱ군 △△면 ■■리 ☆☆번지 등 총 13건, 34,179㎡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농업법인에서 매수한 위 농지에 대하여 감면취득세 추징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마라톤대회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합천군 @@@@과에서는 ○○마라톤대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관련 규정 시행일(2015.1.1.) 이후임에도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님에도 공모 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였고,
- 보조사업자인 합천군■■■가 이벤트 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낭비가 예상 됨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가 선정 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교부조건에도 계속 명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또한, 정산시에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지출내역과 대조 등을 통해 지출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합천군■■■가 통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고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공무원에게는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지 적 사 항]

- 합천군 @@과에서는 2015.12월 ○○○○○○ 추가활동 지원비를 배부하면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변경, 전(이)용 등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예산편성 목적 및 예산과목과도 전혀 맞지 않은 법령 및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집행 가능한 포상금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을 본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기준경비를 초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공무원에게는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외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12명

[제 목] 출장여비 중복 수령 부적정

[지 적 사 항]

- 합천군 @@과 외 □□□ 부서에서는 국내여비와 시설부대비(여비)를 중복하여 수령

[처 분 요 구]

- 부당하게 중복수령한 여비 총 ○○○천원은 전액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87,761천원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 및 미부과

[지 적 사 항]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 농지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 2013년부터 2018년 감사일인 현재까지 총 80건, 101,721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 등 총 28건 3,761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취득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하여 훈계조치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공무원 및 가족 MT 행사 예산집행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 제33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직원 및 가족 화합 목적의 “직원 및 가족 MT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으로 직원 가족에게 3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군수 방침 결재를 득 하였다.
- 이후, 2015년, 2016년에는 공무원 가족 수 대로 현금 총 1,480명, 44,400천 원을 각 실과의 주무계장 또는 서무담당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부서에서 각자 해당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행정과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각 실과의 주무계장 또는 서무담당자의 통장에 총 735명, 22,050천 원을 계좌로 입금시킨 결과 최근 3년동안 총 2,215명, 66,450천 원을 현금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하여 훈계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실,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군정뉴스 제작 용역 부적정

[지 적 사 항]

### 가. 특정업체 외에는 응찰할 수 없는 과도한 요건으로 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제한 등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실과 △△과에서는 군정 주요시책·행사, 의정·유관기관 소식 등에 대한 군정뉴스 제작·방영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2014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 공고서상의 입찰 참가자격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송법 제9조에 의한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필한 업체”와 “군정뉴스의 제작과 함께 합천군을 포함한 경남지역 최소 5개 이상 지자체에 지상파 또는 케이블 TV에 방영가능한 업체”는 사실상 현재 합천군 관내 케이블 방송업체인 (주)※※※※만이 가능하여 재공고입찰에도 (주)※※※※의 단독응찰로 매년 유찰(2014년 2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1개 업체가 적격심사 결과 미자격으로 탈락)되었고,

다음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유찰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매년 입찰 참가자격의 변경 없이 @@@@실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공고한 후 유찰되어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행정력 낭비와 3,346천원 정도의 예산낭비(예산낭비액 : 2억원 미만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87.745% 적용)를 초래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업자 용역 수주 기회를 제한하였다.

#### 나. 입찰 공고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 재공고입찰 등의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본 건 용역은 매년 수행해오고 있는 주기적 업무라 긴급입찰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입찰로 단 5~6일만을 주어 기존 수탁자 외에 다른 입찰 참가예정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입찰 증빙서류 및 장부 보존 소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관련 별표 및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합천 군정뉴스 제작 및 방역 용역 입찰 자료를 분실하여 개찰결과 1순위인 (주)❖❖❖❖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2순위 업체인 (주)❖❖❖❖와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군정뉴스 제작 용역 입찰 참가자격 조정으로 연례 반복적인 유찰을 방지하고

군정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 ☆☆☆☆☆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2012. 3. 22. 개정으로 삭제됨으로써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합천군 환경기초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위원장을 부군수가 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위원장을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2015. 12. 21. ☆☆☆ ☆☆☆소-12370호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합천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장)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5. 12. 23. 평가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합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근거로 다른 시·도의 위원을 전혀 선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나. 입찰 공고기간 부적정

- 같은 예규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제1호 입찰공고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의 입찰 공고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소에서는 3년 주기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는 주기적 업무라 긴급입찰 사유가 없는데도, 긴급입찰로 단 15일간의 제안서 작성기간만을 주어 참가예정업체가 충분한 제안서 작성과 제출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다. 운영인력 배치 부적정

-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 협약서」 제11조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5. 운영인력 구성에는 22명(2017년부터는 시설증가로 23명)을 기준으로 하되,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대행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한 적정 인력 배치율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5조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인수인계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소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무를 추진하면서,
  - 수탁자인 ※※※※(주)와 (주)○○○○○○○○이 ‘16.01.01.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기술인력 6명(고급 2, 중급 3, 초급 1)을 142일간 배치하지 않아, 정당지급액 기준 22,261천원(인건비/보험료 포함)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관련법령과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실제로 근무(배치)하지 않은 운영인력 인건비(보험료 포함) 22,261천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목]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2012. 3. 22. 개정으로 삭제됨으로써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위원장을 부군수가 되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제안서 평가 시 위원장을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2016. 11. 9. ◆◆◆◆과-42442호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합천군 소속 공무원 2명(@@@@실장, ◆◆◆◆과장)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6. 11. 25.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합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근거로 다른 시·도의 위원을 전혀 선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나. 운영인력 배치 부적절

-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에는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적절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5. 과업의 범위. “가”에는 수탁자는 당해 시설에 대한 “원가산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술자 등급 이상의 기술 인력(37명) 및 법률에서 정한 자격이상의 기술자를 상주시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 수탁자인 ■■■■(주)와 (주)♣♣♣♣♣♣이 '17.01.01.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운용인력 6명(중급 1, 초급 3, 단순노무 2)을 166일간 배치하지 않아, 정당지급액 기준 15,022천원(인건비/보험료 포함)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관련법령과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실제로 근무(배치)하지 않은 운영인력 인건비(보험료 포함) 15,022천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및 예산집행 과목 부적정

[지 적 사 항]

### 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의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소에서는 ○○○○○○○○○○○회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세입 조치 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바로 공연료, 강사수당, 공연물품 구입 등 총29건에 70,434,960원을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나.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과목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는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소에서는 ●●●●●회의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공연료 중 자부담분 5건에 22,862천원을 사업소 예산의 행사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배우자 명의 임야 등에 산림사업 시행

[지 적 사 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및 「합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조림사업 담당자가 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의 회피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기 부인 소유임야에 조림 신청하고, 산림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직무수행 중 자신의 부인 소유 임야에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 회피를 하지 않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조치 하시고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합천○○○ ★★★★★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VI-5-가. 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신규 공종의 추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신규공사로 발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2014. 1. 22.부터 2015. 11. 20.까지 “합천○○○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신규 추가된 공사를 별도 발주하여야 하나, 설계변경 계약하여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설계변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조치 하시고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8명

[제            목] 특정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지 적 사 항]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50헥타르 이상의 숙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을 ●●●●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총 24건, 1,132,924천원의 사업은 50헥타르 미만의 「숙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합천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 ‘15년부터 ’17년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추정가격 22,000천 원(부가세포함) 이하 사업으로 분할하여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통합발주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통합발주하여 경쟁 입찰하였을 경우 14,340천 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조치 하시고
-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69,700천 원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합천 ○○○○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 적 사 항]

-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천 ○○○○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따르면 조경석의 실제 체적률은 돌의 형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연석(산석·강석)과 가공조경석 모두 약 70%의 평균적인 실체적률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적계산은 체적=높이×폭×길이×실체적률로 하고 단위중량은 화강암 기준 2.65ton/m<sup>3</sup>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경석 수량 산출 시 실체적률 70%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다.
- 위 공사 ○○○부지 조성을 위해 토취장을 합천군 ○○○○ 옆 인근 야산에서 운반(L=3.0km)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 거리는 L=1.5km임에도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감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미협의를 대하여는 조속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조경석 수량산출 시 실체적률 미적용 및 순성토 운반거리 미조정으로 과다 설계된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882천 원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교량 재가설공사 외 1건 공사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교는 지방하천인 ○○천을 횡단하는 노후교량으로 기존교량을 확장 및 개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교는 ○○소하천을 횡단하는 노후교량으로 교량 재가설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준공을 하면서 허가조건 사항인 공사 준공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가설시설물은 그 사용기간에 따라 강재류는 3개월에 손율 15%를, 흙관은 3개월에 8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배수로의 파형강관 및 흙관을 손율 계상 없이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으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교는 차량통행이 제한된 노후교량이고 하천기본계획 등 시설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교량으로 위 공사 이후에도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교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가시설물인 파형강관은 관급자재로 구입하여 도급자가 시공·처분하였으므로 파형강관에 대한 고재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10명

[제 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부적정

[지 적 사 항]

-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 등 3개과 7개 사업은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 추진 하였으며, @@과 등 2개과 5개 사업은 공사발주 후 시행허가 신청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요인제공과 추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사항이 고시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도 고시되지 않아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여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신을 초래함.
-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합천군으로 이전등기 하였으며, 준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지 못하여 도로관리 혼선초래

[처 분 요 구]

-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 없이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이미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변경된 도로구역을 일괄 반영(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하여 변경된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합천군으로 소유권 이전한 편입부지와 준공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도로관리청으로 이전등기 및 관리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23,300천원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간 및 ###~♣♣간 확포장사업 추진소홀

[지 적 사 항]

- 군도\*\*호선 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기 2개 도로현장은 약 3km 이격되어 토사처리 계획을 적절히 공유하여 계획할 수 있었음에도, 용역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순성토와 사토물량에 대한 토사처리 비용을 각각 반영하여 공사비 약 74,000천원을 과다반영 하였으며, ###~♣♣간 도로는 확장계획을 기존도로 양쪽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음에도 산지 쪽으로만 확장계획 하여 산지의 과다한 훼손으로 공사비 약 49,300천원이 과다 설계되는 등 총 123,300천원 상당이 과다 설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구역이 변경됨에도 도로구역(변경)사항을 고시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 받지 못하여 ###~◆◆간 도로는 산지·농지전용 허가를 공사발주 한 이후에 개별법으로 허가받았으며, ###~♣♣간 도로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 간 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순성토가 필요한 인근 ###~◆◆간 도로현장에 처리하지 않고 사토처리에 대한 별도의 내부방침 없이 공사현장 주변 농경지에 무단 반출하였으며, 사토운반거리 조정에 따른 정산 누락, 안전시설목 설치 수량 미정산, 신설도로에서는 불필요한 미끄럼방지포장 반영 등 공사비 약 38,120천원 상당의 예산절감 요인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사토 운반거리 조정에 따른 미 정산 및 안전시설목 실 설치수량 조정, 불필요하게 반영된 미끄럼방지포장 등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 약 38,120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925,410천원

[신분상 조치] 문책 4명

[제 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합천군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엔지니어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하여 책임건설관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어 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누수확인을 위한 수압시험을 총 23회 중 6회는 시험을 미 실시하고 시험 한 17회 중 4회는 사진촬영 각도만 다르게 촬영하여 허위 보고하는 등 수압시험을 부정하게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으며,
- 공용중인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 협의애로 등을 사유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지속적인 계측관리가 수반되는 비경제적인 추진공법 대신 도로 횡단지점 전후에 위치한 교량이나 횡단구조물을 활용한 관 메달기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약 478,400천원 상당의 예산절감 요인이 있으며,
- 도로 횡단구조물 이하로 계획된 관로부설 방법을 관 메달기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가시설 시공을 제외시키고 관보호 골재는 비경제적인 모래대신 석분으로 대체시공이 가능하며, 중복계상된 안전휀스 설치비용 조정 등 공사비 약 447,000천원 등 위 도합 약 925,410천원 상당이 과다 계상되어져 있음

## [처 분 요 구]

-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시행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와 수압시험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고 허위보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1, 2차 시공분에 대해 계획된 총 23회의 수압시험 중 미 실시되고 허위 보고된 10개 지점에 대하여는 수압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 관 부설 방법을 조정하는 등 설계내역과 현장 부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현재까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공사비 약 925,410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허가 부적정

[지 적 사 항]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합천군 @@@@과에서는 2016. 8. 29. #####가 신청한 합천군 \$\$\$ \$\$\$ 910-331번지 %%%%%%%%%(제조업소) 허가 건에 위의 규정에 따라 공장(제조업소) 설립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2016. 10. 25. 건축허가(협의)를 하였으며 2017. 8. 16. 사용승인서를 통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5명

[제 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소홀

[지 적 사 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부과 하였으며, 합천군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 무자격자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관련법령 개정으로 #####은 2종시설물 등록 대상이나 누락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홀을 초래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합천군에서는 정밀점검을 미이행한 \$\$\$\$\$\$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시설물종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누락된 #####은 즉시 등록조치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과에서는 본 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공모를 통해 ♡♡♡♡(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공모 등을 통해 여러 업체에 공정한 기회 제공 및 견실한 업체 발굴 등의 노력 없이 당초 공모 내용을 완화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 등의 업무를 위탁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기초로 상호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 없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음.
- 협약서의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담과 협약해지 조건으로 인해 협약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협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함

[처 분 요 구]

- 기 추진한 조사설계용역에 대하여 타절정산시 납품받은 용역 성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업무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소에서는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필요한 단가에 대하여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2009. 5. 이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012. 1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용역결과 활용하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으며,
- 감사일 현재까지 2009년 공고된 단가를 적용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군 공보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2,090원

[신분상 조치] 문책 2명

[제 목] △△ 및 □□□□ 정비공사 추진 소홀

[지 적 사 항]

- ♡♡과에서는 본 공사 추진시 설계에 반영된 장비로 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견실시공이 되지 못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자를 선임되었음에도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토취장 선정에 대한 내부방침 없이 임의로 선정 및 보고를 누락하고, 운반거리 및 품질시험비에 대한 정산 및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정산이나 설계변경이 없이 준공처리하여 과다 지출된 공사비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